

[ 현안진단 36호]

[특별기고] 화합의 좌절과 21세기의 재일동포사회

정갑수(코리아NGO센터 대표이사 / 원코리아페스티벌 실행위원장)

I. 5 · 17공동 성명

II. 6 · 24임시중앙위원회

III. 21세기의 재일 동포사회

I. 5 · 17공동 성명

지난 5월17일 일본 마스크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총련)의 중앙수뇌들이 회담을 통해 ‘화합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는 뉴스가 전해졌다. TV에는 하병욱 민단중앙단장과 서만술 총련의장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까지 비춰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후의 재일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이 두 단체는, 한반도의 남북분단을 반영하는 격심한 갈등을 되풀이해 왔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남한 측을 지지한 민단이 의용병을 파견한 데 대해서, 총련의 전신인 민전 (재일조선 통일 민주전선 51년1월 결성)은 미군의 무기수송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59년 12월에 시작되었던 소위 북송(북한으로의 귀국사업)이나, 65년의 한·일 조약 등을 둘러싼 갈등을 거쳐, 60년대 말, 총련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총련의 기본사상으로 삼은데 반해, 민단은 유신체제를 지지하는 등, 두 단체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양자의 대립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실현되고, 민단이 사회보장 면에서의 차별해소나 지문 날인문제 등, 재일 동포의 권익옹호 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80년대에 접어들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5 · 17공동성명은, 반세기 이상 대립해 온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단·총련 회담이 이루어진 5월 17일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발표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총검으로 탄압한 「광주민중항쟁」의 첫날이기도 하다. 그러한 역사적 기념일에, 양 단체의 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화합과 협력에 관한 합의 의미는 각 별하다고 할 수 있었다.

코리아NGO센터에는 5·17공동 성명이 발표되는 전날부터 보도기관의 취재요청이 쇄도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피력하는 성명을 발 빠르게 발표하기도 했다. 코리아NGO센터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평화인권·공생의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는, 원(one)코리아 페스티벌 실행 위원회, 민족교육문화센터, 그리고 재일한국민주인권협회의 3단체를 모체로 하여 2004년에 발족한 재일 동포의 시민단체이다. 발족 후, 다양화되어 가는 재일 동포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발표한 성명문(“재일본 대한민국 민단(민단)과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총련)의 역사적 회담과 공동 성명발표에 즈음한 성명문”)의 일부를 이하에 소개한다.

(민단/총련의) 이번 회담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통해 한반도가, 과거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대립과 분단의 시대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통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38선」에 의해 얽매어 온 재일 동포사회에도 드디어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린 동포들이 조직의 테두리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이뤄 내고자, 교류와 협력을 위해 거듭해온 영위의 결실이다. 아울러 최근 재일 동포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정력적인 활동이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진 성과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과 공동 성명발표는, 양쪽단체의 역사적인 합의에 머물지 않고, 양쪽단체를 포함한 재일 동포 모두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위한 선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교육권의 확립이나, 장애자고령자의 연금문제, 거주취직에서의 차별문제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통일, 일본에서의 다민족 다문화공생 사회 실현을 위해서, 모든 동포가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성명에는, 민단·총련의 공동성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조국의 역사적 변화를 상기시키며, 재일동포의 지역사회 영위와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해 언급하였고, 그러한 제반 토대 위에서 이번 공동성명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다양한 단체, 개인과의 대등한 입장에서 연계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일본의 언론이나 재일 동포사회 일부에서 5·17공동성명을 비판하거나, 야유하는 분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일부 매스컴은, 이 화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남북화해 무드를 고조시키기 위해 남북 양 정부에 의해 연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양쪽단체가 각각 본국 정부에 예속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견해다. 그러나 총련과 북한의 관계는 그럴 수 있지만, 민단은 90년대 이후, 상당한 수준의 자율적인 활동 기반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민단이 본국 정부에 종속돼 있다면,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전개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 2000년 전후의 시점에서, 민단이 이미 유화정책에 의해 태도가 변했을텐데, 민단 중앙은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단에는 보수파가 많은데다가, 그동안,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문제가 일본사회에서 크게 거론되었으므로, 총련으로부터 그러한 문제에서 설득력 있는 총괄이 없는 한, 유화정책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단 중앙의 공통 견해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 수준에서도 화해를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지방 수준에서는 총련과의 공동행사나 축제 등을 통한 화해가 자발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더구나 올해 2월에 실시된 민단의 단장선거에서는, 총련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개혁파가, 신중한 수구파를 누르고 승리했다. “따라서 총련과의 화해는, 한국 정부에의 종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민단 단원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하고, 새로운 단장의 선거 공약을 받아들여 투표한 결과였다” (박일 ‘총련과 민단의 화해 - 그 배경과 과제’ “인권협회 NEWS” 제 5호 2006.7)

한편, 이번 화해가 북한정부의 지시에 의한 민단의 “총련화” 를 노린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5·17공동 성명을 제의한 것은 민단 측이며, 제의를 받은 총련이 본국의 승인을 얻어서 이번 화합이 실현된 것이었고, 본국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하나, 거기에는 총련 나름의 주체적인 판단이 내재한 것이었다. 그런데, 5·17공동성명 발표 직후 민단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 성명은 「백지화」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화합의 좌절” 사태의 전말과, 이 사태가 재일 한국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6·24 임시중앙위원회

5·17공동성명이 재일동포사회에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매우 성

급했다. 광주에서의 「6·15통일 행사」에의 공동참여를 앞두고, 하병욱 단장이 총련과의 협상을 비밀리에 서둘러 추진하는 바람에 기관 심의나 내부 합의없이 성명을 전격적으로 발표해버렸던 것이다. 협상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민단내부에서의 민주주의적 논의와 절차의 결여가 단원들의 반발과 의심을 일으키고, 민단을 혼란 속에 빠뜨린 것이다. 민단의 지방조직으로부터는, 총련과의 화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보수언론인 “통일일보”는 민단 집행부 비판의 캠페인을 전개했다.

“통일일보”는, 사실을 통해, 총련이 “재일 한국인의 권익을 지켜야 할 본래의 입장에서 크게 이탈하고,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이해를 피하는 것에 급급해”, “민족교육은 김일성·김정일 숭배 교육에 급급, 등한시하고, 산하 상공인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난처하게 할 만큼, 북한으로의 송금을 강요했다.” 또한 “총련의 그러한 방침은, 일본 사회에 실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산하 맹원들에게, 일본인납치를 방조하게 만들어, 북한이 관련되는 마약거래에 관여시키고 있다.” 그러한 총련과의 화해는, 민단을 “북한 옹호단체로 타락시키는 중대문제”라고 논평했다.

요컨대 “통일일보”의 논리는, 총련이 북한정부에 예속하는 악의 조직이며, 화해는, 민단 총련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단의 총련화”라는 주장에는 그 나름의 배경이 있었다. 한국에서 유신체제가 성립되었던 1970년대에, 민단 도쿄(東京)본부나 가나가와현(神奈川縣)본부가 “민단자주수호 위원회”를 설립하고, “반독재 민주화”를 내걸어서 친북적으로 여겨지는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병욱 단장이, 구한민통(한국민주회복촉진국민회의 일본지부)등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인재를 간부로 등용한 사실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 수준에서의 비판이나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단의 집행부(중앙집행위원회)는, “6·15통일행사”에의 참여를 삼가는 동시에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문제에 대처 할 수밖에 없었다. 6월 24일, 도쿄 미나토구(港區)의 한국중앙회관에서 열린 임시중앙 위원회에는, 정원 205명중 171명이 참여했고, 100명 가까운 방청자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1)총련 및 한통련과의 협상을 추진한 3명의 중앙간부의 책임, (2)5명의 부단장의 책임, (3)단장의 책임, (4)5·17공동성명의 백지화 등을 쟁점으로 심의가 행해졌다. 하병욱 단장은, 혼란을 초래한 비밀협상이나 상황판단의 잘못은 사죄했으나, 자신의 진퇴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단장직을 유지하고자하는 의향을 보였다. 책임소재에 대해서 하단장은, 5명의 부단장의 사표 제출과 기획실장 및 평화통일위원장의 사임으로 책임문제를 일단락 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고문단이나 지방간부들은 단장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물론, 5·17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지방간부의 발언도 있었지만, 반대파의 목소리가 컸고, 심지어 총련에 대해 미사일 발사의 중지나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일소, 납치 피해자의 원상 복구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호소하자는 취지의 결의서까지 새롭게 채택되었다. 혼란의 조기수습을 도모하던 하병욱 단장은, 공동성명 체결에 영향을 미친 간부들의 처분과 “성명 백지화” 조치를 통해 자신의 신임 회복을 강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납득할 수 없는 위원들은 5·17공동성명의 무효화와 하단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긴급동의를 제출하였고,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의는 중단되었다.

7월 6일, 전날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하병욱 단장은 총련 중앙의 서만술 의장에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북한의 폭거에 의해, 일본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재일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 단으로서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5·17공동성명의 백지철회를 정식으로 통고했다.

한편, 6·24임시중앙위원회 이후, 민단집행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34지방본부와 5개 산하단체가 참여한 “민단정상화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서명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7월 14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민단 오사카(大阪)본부가 부하(府下) 35지부중, 23지부가 참석하는 가운데 반(支)단장회의가 열렸고, 하병욱 단장의 사직을 요구하는 “5·17공동성명 후에 관한 오사카(大阪) 본부의 통일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러한 퇴진 촉구의 목소리에 밀려, 결국 7월 21일, 민단중앙본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하병욱 단장을 비롯해 김광승(金廣昇) 의장, 김창식(金昌植) 감찰위원장 등 3기관장 전원이 9월 15자로 총사직 할 것임을 확인하고, 10월에 임시중앙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총련과의 화해의 좌절이, “개혁 민단”의 좌절로도 귀결된 것이다.

Ⅲ 21세기의 재일 동포사회

하병욱씨가, ‘개혁 민단’을 내걸어, 총련과의 화합을 공약해서 중앙단장으로 당선된 것은, 민단의 많은 단원들이 총련과의 화합에 찬동하고, 민단의 개혁을 지지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그토록 격화된 것은, 여전히 뿌리가 깊은 민단 내부 보수파의 공세가, 비민주적인 정책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과 결합되었기 때

문이다. 그 점에서, 민단 내의 진보세력이 내건 개혁의 내용을 엄격하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개혁 민단’ 이 내건 화해와 협력 정책은 민족의 대의에 합치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수법은 구태의연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민단 단장선거에 앞서, 지방 수준에서 총련과의 교류나 협력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단장선거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민단·총련의 화합정책이 지지를 받은 셈이었다. 이러한 토대에 의거해서, 만일 화합정책이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여러 차원에서의 열린 토의와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결코, 5·17공동성명의 백지화와 집행부의 총퇴진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개혁’ 이란 무엇보다도 민단의 의사결정이나 조직 운영의 ‘민주화’ 여야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민족의 대의를 내세우는 개혁세력의 비민주적인 성향이 드러났고, 이것이 보수파 측에서 민주주의의 대의를 내세워 화합정책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민단과 총련간의 화합의 좌절은, 민단 민주화의 좌절이며, 그것은 재일동포사회 안에서 총련·민단 모두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지금, 재일 한국인사회는 큰 변화 속에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이른바 좁은 의미에서의 재일 한국인이라 할 수 있는 한국·조선 국적의 “특별 영주자” 는, 50만명 선을 처음으로 밀들게 되었다. 일찍이,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의 9할 전후를 차지하던 재일 한국인의 비율도, 90년경의 5할 전후의 시기를 거쳐, 지금은 3할에도 미치지 않는다. 소위 뉴커머(newcomer)를 제외하는 국적상의 재일 한국인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1995년 이후, 한국·조선 적의 귀화자수가 년 1만 명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21세기의 중반에는 국적상의 재일 한국인은 소멸할 것이라는 견해마저 있다.

재일 한국인의 세대구성도 1세·2세부터, 3세·4세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압도적 다수의 젊은이들이 일본사람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온 뉴커머(newcomer), 중국에서 온 조선족의 증가 등, 국적, 민족, 가치관 등의 다양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총련·민단 모두 조직기반의 쇠퇴가 현저하다. 총련은 전성기의 20만 명이 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고 추측되고, 2002년 9월의 고이즈미(小泉) 방북당시 북한이 일본인납치를 인정한 이후로는 국적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꾸는 동포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조선국적·한국적의 변동 내역은 공식적으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보도에 의하면, 재일 동포의 최대의 집거지 구인 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區)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조선국적을 한국국적으로 바꾸는 동포가 전년 동기의 3.5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마이니

씨신문(每日新聞)』 3월20일자).

한국국적으로 바꾸는 동포가 늘어났다고 해도 민단의 단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민단 단원 수도 예전의 50만 명 수준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지금은, 민단·총련 등의 전통조직이 동포사회에서 갖는 대표성 자체가 의심스러워졌다. 성명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재일동포의 화합은 이제 민단·총련이라는 틀만으로 생각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70년대 이후, 재일동포사회에는 총련·민단 등의 본국 직결형의 조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운동이나 단체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금 이들 NGO나 시민단체는, 민족교육으로부터 참정권문제, 그리고 연금문제나 노인 간호에 이르는 폭넓은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일동포의 화합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NGO나 시민단체, 개인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보다 폭 넓은 재일 동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민주적인 대화를 끈질기게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재일동포 사회에서 민단·총련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관습화된 권위주의적인 사업방법의 쇠퇴, 다시 말해, 사회 운동에 있어서의 발상이나 문화 그 자체의 민주적인 변혁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2006/07/27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